

수도권 과밀화 저지 및 수도권-지방의 상생을 위한 전국투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6. 11. 10(금) 오전 11시

● 장 소 :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사 회 : 김종남(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씀 -전국투어단 환영

송인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석자 소개

전국투어 취지 및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업 설명

안명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공동 결의문 낭독

-충청권 시도민의 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권 저지하자!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질의·응답

2부 / 대전충남 지역간담회(중식)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원회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 공동집행위원장 안명균(017-727-9070) 간사 지찬혁(010-2364-5005)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Tel. 02)735-7000 Fax. 02)730-124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 : 대전충남녹색연합 042)253-3241 / 간사 양흥모 국장(016-795-3451)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 : 041)934-1254 / 이정일 집행위원장(011-9738-0227)

전국투어 취지 및 방문일정

1. 전국투어 취지와 배경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강당에서 수도권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퇴 요구와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수도권 과밀화 저지 및 지방과의 상생을 위한 전국투어' 출정식을 갖었다.

2주간에 걸친 전국투어는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집중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수도권에 집중에 따른 지역의 문제점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시민홍보, 순회토론회, 규탄대회, 지역간담회 및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이 전국투어를 통해 전국 조직의 구성, 전국적 운동 목표의 수립, 전국적인 공동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며,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과의 상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수도권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공동의 결의를 다지며, 못물처럼 터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전국의 뜻을 모으고 전국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전국투어에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기로 결의하였다.

2. 방문일정

- | | |
|---------------------------------|------------------------------|
| ○ 서울지역(10/31) : 전국투어 출정식 | ○ 충북지역(10/31) : 대토론회 |
| ○ 경기지역(11/ 1) : 규탄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 ○ 강원지역(11/ 2) : 대토론회 |
| ○ 부산지역(11/ 6) : 지역간담회 | ○ 울산지역(11/ 7) : 지역간담회 |
| ○ 대구·경북지역(11/ 8) : 대토론회 | ○ 광주·전남지역(11/ 9) : 간담회, 기자회견 |
| ○ 대전·충남지역(11/10) : 기자회견, 지역간담회 | ○ 인천지역(11/13) : 지역간담회 |
| ○ 경기지역(11/14) : 규탄대회, 대토론회 | ○ 서울지역(11/15) : 해단식, 경과보고대회 |
| ○ 경남지역(11/20) : 대토론회 | ○ 전북지역(11/20) : 정책포럼 |
| ○ 공동대표단, 국무총리 면담 추진(11/15~12/4) | ○ 전국대표자회의 및 결의대회(12/5) |

발족 배경 및 향후 활동계획

1. 발족 배경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가장 핵심적 국정과제중의 하나였다. 이는 콩나물시루와 다름없는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한국경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기형적 경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경제력이 지나치게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을 급증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심각한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밀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참여정부가 실제 추진해온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포함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문제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해 수도권의 개발형국은 심화되고 국토불균형은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과 과팽창에 반대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정치세력들은 총 규합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며 진정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과의 상생의 길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의 주요내용 및 동향

1) 주요 내용

- ① 성장관리권역 침단산업 공장 증설 허용(100%까지)
- ② 25개 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2007년말까지 연장
- ③ 8개 침단업종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설 허용
- ④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하여 61개 업종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신증설 허용
- ⑤ 수도권 각종 신도시 개발
- ⑥ 관리지역내 공장설립면적 제한 폐지(현행 1만 제곱미터)
- ⑦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확대
- ⑧ 자연보전권역의 개발허용 면적을 현행 6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로 확대
- 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3,90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

2) 정부 동향

- 2005. 5.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 3년 연장
- 2005. 6.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
- 2005. 7.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개선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입법 예고
- 2005. 11.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 2005. 12.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대체입법 발의
- 2005. 12.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개선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 수질오염총량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50만²m까지 확대
- 2006. 2. 군사시설보호구역 6523만평 전면 해제 및 623만평 통제구역의 완화
- 2006. 5.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의거 수도권 그린벨트 4113만평 해제
- 2006. 6. 오염총량제 실시, 수도권 사군의 공장증설 허용
- 2006. 7. 도지사 직속 ‘수도권 규제 혁파 추진단’ 신설
; 수정법 폐지 및 대체 입법 제정 때까지 지속적 추진, 예산 4억원 배정
- 2006. 8. 건교부의 정부청사 이전 부지 개발계획 발표
- 2006. 8.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시사(권오규 경제부총리)
; 2007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내놓겠다는 입장 발표
- 2006. 8. 서민경제회복방안 발표(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정,
첨단산업에 한해 심의절차 없이 수도권 공장 증설을 자동 승인 결정
- 2006. 8.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통과
- 2006. 9. 공장설립 등 기업입지 요건 완화(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 2006. 9. 공공기관 이전부지 이용계획 관련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 논란, 건교부의 도시관리계획 권한 삭제 요구
- 2006. 9. “9월 말까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100가지 이상의 세부과제와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종합대책’ 을 마련” (김석동 재정부 차관보)
; 창업에서부터 공장입지, 환경, 법률, 금융지원대책, 구조조정까지의 모든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포함, 규제완화대상의 사례별 검토 착수
- 2006. 9. 재정경제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수도권 공장신증설을 신청한 8개 대기업 중 성장관리권역내 4개 기업의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 발표,
‘공장입지유도지구’ 를 신설하여 환경평가를 비롯한 13개 규제면제 방침 발표

- 2006. 10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신규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 경기도가 추진중인 600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와 별개로 2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계획 발표
- 2006. 10 추병직 건교부 장관, 재경부장관 하이닉스반도체 수도권투자허용 적극 검토 발표

3)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동향

- 2006. 5. 지자체 선거 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
- 2006. 5.17. 3개 시도지사 당선자의 수도권 비전 발표 및 합의문 채택
- 2006. 6. 6. 수도권 대통합론 제안, 적극적인 규제완화 주장
- 2006. 6.15. 3개 시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의 수도권 협의회 구성 합의
- 2006. 6.26. 팔당호종합대책추진단 발표, 경안천 준설 및 하수도 보급확대,
하수처리시설 77개소 증설(827억 투입) 등을 통한 팔당호 인근 규제 철폐 내용
- 2006. 7. 3. 김문수 지사 취임사. “수도권정비법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보다 더 나쁘다.”
- 2006. 7.11. 수도권 확장은 세계적 추세, “수도권 일부지역 인구 감소는 탁상행정의 결과”
- 2006. 7.19. “수도권규제 혁파하고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해 이기는 것이 임기 내 목표”
- 2006. 8.28.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지역 열우당 국회의원들과 첫 정책협의회
- 2006. 8.30. 경기북부 개발계획 추진, 경기도의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미군반환공여지종합개발
용역비 7억원 반영하여 개발계획수립 작업 착수
- 2006. 9. 4. “부산·울산·경남 단합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대수도론의 반향”, “행정의 세분
화, 즉 서울을 다섯 개, 경기도를 열 개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
수도론과 같은 대통합론은 하나의 추세로, 뭉치고 일정 규모의 경제단위를 이뤄 경
쟁력을 갖추야 바람직하다”고 언급
- 2006. 9. 7. 한국규제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규제개혁 관련 학술대회, 규제에 따른 경
기도의 기업피해사례 발표
- 2006. 9.14. 경기도-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
- 2006. 9.25.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신증설 계획 발표
- 2006. 9.26. 2010년까지 1조5천624억원을 투입하는 ‘팔당종합대책’ 발표
- 2006.10. 9.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100일 기념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발표에서 “경기도에 단
순한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는 5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계획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 예산은 총 87조2천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4)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 동향

- 2006. 6.12.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대수도권론은 지방 붕괴론’ 성명 발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체 구성 협의, 13+13회의체 구성 협의

- 2006. 6.15. 비수도권 기획관리실장, 대수도록 반대 입장 결의
- 2006. 6.19. 충청권(대전, 충남북) 광역 단체장 대수도론 저지 결의
- 2006. 6.22. 광주, 전남 경영자 단체들 성명발표
- 2006. 6.22. 부산, 울산, 경남 협의회 구성, 사도자사 대수도론 반대 공동선언 발표
- 2006. 6.24. 김성조의원, 김문수지사에 비수도권발언 사과 요구 성명발표
- 2006. 6.25. 강원지사 ‘비수도권 연대 초력대응’ 기자회견
- 2006. 7. 한나라당 당과 협의 안 거친 정책발표 자제 입장 표명
- 2006. 7.12.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등 293개 시민단체 대수도론 반대 기자회견
- 2006. 7.20. 권오규 경제부총리, ‘수도권 규제 새로 완화할 부분 없다’ 기자회견
- 2006. 7.26.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 ‘대수도론과 지역 대응전략’ 토론회
- 2006. 8. 4.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균형발전론과 대수도론’ 대구경북 토론회 개최
- 2006. 8. 8. 청와대시도지사회의, 대통령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의견 표명
- 2006. 8.12. 정정복의원(한, 경주), ‘대수도론은 차차기노린 정치적 전략’ 기자회견
- 2006. 8.18.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대수도론 대응 전략워크숍’ (충북)
- 2006. 8.29.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 일극체제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개최
- 2006. 8.31. 부산·울산·경남 공동발전 합의,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

3. 발족 경과보고

- 8.22. 수도권집중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회의 제안, 12개 단체 참여
- 8.29. <수도권집중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결성
- 9. 5. 1차 준비위 실무책임자(집행위) 회의
- 9. 8. 주한미군 기지터 공장허용 반대 성명 발표
- 9.11. 수도권집중반대운동을 위한 전국 전략워크숍(인권위 배움터) / 집행위원회 회의
- 9.13. <수도권집중반대 전국연대(가칭)> 1차 실무회의
- 9.20. <수도권집중반대 전국연대(가칭)> 2차 실무회의
- 9.25.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으로 명칭변경
- 9.26.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3차 실무회의 및 실무책임자(집행위) 회의
- 9.27.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집행위원회 회의
- 9.28. 재정부의 공장 신증설 허용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 폐기 촉구 성명 발표
- 10. 9. 집행위원회 및 실무회의
- 10.11. 17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서명 요청서 발송
- 10.31. 수도권과밀반대 전국투어 출정식 / 추병직 장관 사퇴촉구 결의문 발표
- 10.31~11.20. 수도권과밀반대 전국투어 및 순회토론회

4.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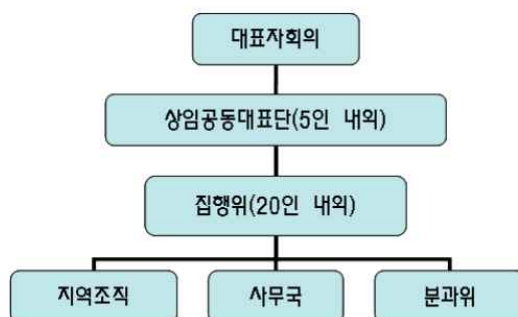
1) 조직 구성의 원칙

- 전국적인 거대 이슈에 대응하는 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함.
- 운동 주체의 확산과 이슈의 무게있는 부각을 위해, 사회 원로와 전문가들의 활동을 적극 요청함
- 지역주의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이고 민첩한 활동을 위해 수도권 단체들과 전국단위 조직들이 운동에 앞장 섬. 각 지역과 분야를 대표한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실행력을 담보한 전국조직 위주의 상임집행위원단 구성
- 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주요 집행위원단체별로 역할 분담
(조직/ 환경연합, 정책/ 환경정의, 대국회 활동/ 녹색연합, 전국 토론회/ YMCA)

2) (가칭)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 참가현황

참여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3) 조직 구성도(계획안)



- 공동집행위원장
안명균(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이두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김민영(참여연대 협동처장)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5. 활동계획

1) 기본인식

- 기득권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리를 포기함으로써, 지역의 소외와 몰락을 재촉하고, 수도권의 자멸을 불러 오는 무책임하고 무정부적인 정치선전과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임.
- 이는 사회의 보수화와 경제담론의 독선에 기생한 신자유주의 주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 비상식인적인 논리임.
- 더욱이 수도권 기득세력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막개발주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그 해악과 부작용이 매우 심대한 상황임

2) 활동기조

- 수도권집중을 방지하고, 대수도론 등 무책임한 규제완화 주장들을 용납하고서는 건전한 국토이용은 물론 합리적 시민운동이 불가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함
- 운동의 단기적 목표를 선명히 하고 연대의 폭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운동 이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악(규제완화)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앞세우고, 지역의 공동화, 소외감, 구조화된 빈곤, 수도권의 과밀화, 난개발, 도심지역 슬럼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함.
- 수도권 과밀 반대에 대한 사회적 명분을 확립하고 범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총망라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투쟁을 전개함.
- 다만 지역이기주의 등의 논란을 피하고, 긴밀하고 효율적인 활동의 전개를 위해 지역적 이익과 무관한 수도권의 단체들과 중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운동함

3) 활동계획

- 대국회 활동 : 현재 수도권 정비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8개의 개정안이 계류중임. 모니터링 활동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 토론회, 서약식 등을 추진
- 사회적 인사 발언 : 사회원로, 전문가 등의 언론 기고, 활동 자문 참여 등을 조직
- 미군부대 이전 부지 내 공장 허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허가 등의 계획 저지 위한 성명발표, 다양한 액션 및 기자회견 등 추진
- 전국 순회 토론회 : 수도권집중 문제의 부각 및 지역 조직 창립을 위한 광역별 순회토론회 개최
- 대안정책 모색
- 정책자료집, 홍보용팸플렛, 정책토론회 등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문

충청권 시도민의 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 저지하자!

오늘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사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권 과밀화 저지를 위한 전국투어단'을 맞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상생의 시대를 기필코 이뤄내려는 500만 충청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작금에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위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즉 수도권은 과잉과 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지방은 빈곤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으며 나라의 기틀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국토면적 11.8%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48.2%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84%가, 대기업 본사의 90%가 밀집하도록 조장해온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의 기형적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지역과의 상생도 가로막고 있다.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공룡화된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대기·수질오염으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병들어 가고 있는 반면, 4,800만 국민의 고향인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며 병들어 가고 있다. 아기울음소리가 그친 농어촌, 취직할 곳이 없는 지방대생들, 텅텅 비어가는 지역의 공업단지, 고사위기의 지역언론, 2대8의 세수구조, 이름뿐인 지방자치 등이 그것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국가 전체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확산시켰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지역으로 형평하게 분배될 때만이 수도권과 타 지역간의 사회적 격차와 갈등이 해소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만이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생의 길과는 달리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 등의 현실을 볼때 이제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공장 신.증설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여 대규모 개발공간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과도한 인구계획을 담고 있으며, 재정부에서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대책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서 자연보전권역마저 무너뜨리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최근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600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와 별개로 2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신규 신도시 개발계획까지 발표하였다. 더욱 암울한 것은 국가 발전의 자원과 동력을 지역간 고르게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을 그나마 규제해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제도적 장치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나 수도권 집중을 통한 성장 일변도의 대수도론 등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킴으로써 수도권의 자멸과 지방의 몰락을 가져옴으로써 공멸할 것임이 확연하다. 이제라도 수도권은 그간 누렸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미련을 하루속히 버려야 할 때이다. 그것만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난개발, 도심지역의 슬럼화 현상과 저하되는 삶의 질을 막아내는 길이며, 지역 역시 더 이상 수도권에 자원과 동력을 빼앗기는 구도가 아닌, 자립적인 혁신과 자기 기반 하에 내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500만 충청인은 신행정수도 쟁취라는 시민승리를 통해 지방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수도권 과밀화 저지 및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나선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준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및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에 관한 일체의 논의와 동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줄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 나아가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를 재촉하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나라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따라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당리당략이나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철저히 경계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나 대수도론 등에 대해서도 충청권 시도민의 힘으로 강력히 저지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06년 11월 1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